



電氣通信과 事業의 民營化

Telecommunications and Privatization

鄭 秀 星 *

Chung, Soo Seung

1. 통신정책의 세계적 추세

범세계적인 통신분야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는 날로 확산되어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까지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고도화는 물론, 민영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이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들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전세계적인 통신사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의 시장구조의 개편방향은 크게 경쟁체제의 지속적인 도입 및 확대, 정부규제의 완화 및 공정경쟁여건의 강화, 통신시장의 수직통합 및 사업다각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으로 인한 자유화 및 세분화의 추세는 이 부분의 기술발전과 수요의 다양화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규제완화의 주요 방향은 시장기능의 우월성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조정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쟁의 확대 및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추세는 현재 새로운 통신사업의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시사해주고 있다.

2. 한국의 통신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 역시 이와같은 세계적인 자유화 추

세에 발맞춰 90년이후에 공기업의 민영화 및 각종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통신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루과이 협상(UR협상)이 완료되고 이에 따라 점차 기본통신 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이 구체화 되자, 현재 우리의 통신시장의 구조로는 대외개방에 직면한 한국통신사업의 발전과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에 통신사업 구조 및 규제체도를 경쟁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통신사업 구조개편 기타 일련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구조정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통신사업구조의 개편과정을 통하여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고객의 욕구에 더한층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완전개방하의 전면경쟁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좀더 갖추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통신시장구조 개편방향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첫째로, 통신사업자의 분류방식을 개편하여 능력있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여 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토록하고 사업영역의 제한은 네거티브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신규사업에 용이하게 진출토록 도모하려함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

*電氣通信, 情報通信技術士. 韓國通信 國際通信本部 情報通信營業部長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분류방식을 통신설비보유 여하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단순구분하게 한다.

둘째로,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로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 의하여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하여 규제하며, 규제서비스는 사업자수와 자격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TRS이며, 비규제서비스는 이들 규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시외전화 경쟁도입 부분이라할 수 있다.

그외에 신규서비스 도입시 조기상용화, 국내 기술개발, 상용화후 서비스 저변 확산을 고려하여, 자가설비보유자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참여를 허용하여 인영설비의 이용효율극대화를 꾀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구도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사업자간의 많은 경쟁선결사항에 관한 주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3. 민영화의 오늘과 내일

한국에서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통신부문에 있어서의 민영화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신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전화및 전신으로 대표되는 기본통신 서비스와 DB, DP, Mail, EDI등이 포함되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전자는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를 다소 완만히 풀고, 후자에 대해서는 경쟁및 기술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기본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통신사

국내통신사업자의 주요재무제표 내용 비교표('93년)
(억원)

구분	금액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자 본 금		14,396	390	277
매 출 액		50,183	3,250	4,281
경 상 이 익		7,207	200	1,372
당 기 순 이 익		4,708	121	761

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경우를 각각 살펴 보면, 우선 한국통신의 경우는

1982년 공사화 이후 지금까지 정부 전액 출자 공기업 체제에서 93년 10%, 94년 10%, 95년 14%, 96년 15%로 4년에 걸쳐 96년까지 49%의 주식매각을 목표로 민영화 추진중이나, 나머지 51%의 주식은 정부가 보유하여 정부의 통제하에 남아 있게 된다. 이와같은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발맞추어 94년 조직개편은 본사기능의 축소, 전략사업부서의 강화, 해외사업창구의 일원화, 지역사업본부의 정보통신서비스 체제강화 등의 방향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의 보급을 위해, 1983년에 설립된 데이콤은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3.6%와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94년초 완전매각하여 민영화가 완료되어, 동양그룹과 럭키금성그룹이 지배주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통신과는 국제전화, 전용회선, 데이터통신, 그리고 CATV사업등 거의 모든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통신산업 주가 변동추이

(억원)

구분	일자	'93. 10. 21	'94. 3. 30	상 승 율
데 이 콤		₩ 43,800	₩125,000	185%
이 동 통 신		₩115,000	₩279,000	143%
종합주가지수		741.10	865.68	17%
한 국 통 신		₩ 25,000	₩ 34,700	139%

*한국통신 가격은 입찰최저가격임('93. 10, '94. 4)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로 한국이동통신(주)는

1984년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독점으로 제공하여 오다가 1994년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으로 형성된 “신세기”가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사업허가를 받음에 따라 95년부터는 신세기와 복점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64%의 주식중 23%를 1차 매각하였고 나머지 주식의 절반이 매각 완료됨에 따라 1차매각 주식을 전량 인수한 선경에게 한국이동통신(주)의 경영권이 이전되었다.

그밖에, 부가통신사업부분에서는 11개의 국제VAN사업자를 포함 대략 170여개의 VAN사업자가 활동중에 있고 금년부터 사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국내인, 외국인 구분없이 자유로이 부가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CATV사업에서는 전송로 사업자로 한국통신과 한전, 데이콤등이, 지역별 방송국운영사업자로 54개업체가, 프로그램 공급자로 51개업체가 등록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민영화의 도입확대는 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와 자율경영의 확대로 해당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민영화가 단순한 주식매각 또는 소유권의 이전과정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서 21세기 비전을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세계5대 종합통신사업자”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통신망의 고도화, 사업의 다각화, 국제화, 첨단기술개발, 대고객 서비스 및 내부경영혁신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결과적으로 통신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보급과 이용자 위주의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한 컴퓨터 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까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민영화가 지분매각에 의한 단순한 소유권이전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행될 경우, 경영효율 증대, 기타 민영화로 인해 기대되는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다수 사업자의 출현은 중복투자, R&D 투자소홀, 특혜시비, 과당경쟁으로 인한 통신질서 혼란 기타의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사업간의 공정경쟁유지, 원활한 상호접속, 신기술개발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제정등 관련당국의 조정, 중재, 관리기능 등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에서 공정하고도 유효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장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의 글로벌화 추세로 국제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짐에 따라, 메이저(major)사업자에 의한 시장의 수직통합, 사업의 다각화, 사업자간의 국제적인 제휴가 최근들어 붐을 일으키고 있음도 주목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민영화의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민영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즉 수직통합, 사업의 다각화, 대형화, 국제간의 제휴등의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기본통신 경쟁도입검토(1994. 3) 한국통신
2. 전자저널(1994. 3) 전자신문사